

'인구대책 3탄' ...퇴직연금 의무화하고 공제한도 200만원 ↑

범부처 인구정책 TF 3번째 대책 발표...고령인구 증가 대응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로 하향...고령자 주택 공급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으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고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된다. 정부가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퇴직연금 전환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60세 이상이 돼야 가입이 가능했던 주택연금은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고, 연금 가입주택 가격기준도 시가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3번째 대책'을 논의 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으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인구대책은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고령인구 활용 증대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기존 퇴직금 제도는 기업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50세 이상 퇴직·개인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소득세는 수령기간과 상관없이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되지만 10년이상 장기로 연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6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가 만기되는 경우 계좌금액 범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추가 불입액의 10%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고갈이 갈수록 빨리잡을수록 빠르므로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의 가입을 늘리고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해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



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가입연령을 낮추고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가입기준을 조정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고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연금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 사망 때 자녀의 동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 승계가 허락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 고령층의 추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주택의 임대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노인기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관련 예산 122조 8500억원을 편성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0년 20개 조성하기로 했다. 1인 고령가구를 위해 1~2인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령 취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고령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 창출전략'도 수립된다. 정부는 은퇴 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소비, 문화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고령산업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또 중장년 창업지원과 장기 재직환경을 조성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신약, 의료기기, 서비스로봇 등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현장은 물론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스1

2033년 10명 중 3명 노인...65세 기초연금 못 줄 수도

노인복지정책 기준연령 조정...장기제정전망 마련 추진



고령인구의 증가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노인복지정책의 기준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 현행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14.3%(737만명)를 차지하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오는 2033년에는 27.6%(1427만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공헌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사업 △돌봄 및 보호 △주거서비스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 △교통안전 등으로 분류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생활지원 정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고려해 현행 65세 기준연령 상향을 검토한다.

의료보장 정책도 노인 의료비와 건강수명,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해 맞춤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연령을 개편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고령층의 평균적인 건강상태가 개선되는 추세인

만큼 의료 지원 사업 기준 연령은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치매지원사업 등의 경우는 필요도에 따라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참여 수요와 고용률, 퇴직연령을 반영해 일자리 공급 규모를 조정하고 일자리 질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경우(1회당)를 올해 3만5000원에서 내년 4만원으로 상향하고 연령 기준도 56~80세(현행 56~70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고령 여성이 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해 구연활동을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이와 함께 재능나눔 일자리도 참여연령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노인복지정책을 개편하는 동시에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장기요양보험은 지출 효율화를 위해 내년부터 장기요양수가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본인 부담 감경제도도 개선한다.

보험료율도 건강보험료율의 10.25%로 상향된다. 앞서 장기요양위원회는 지난해 올해 8.51%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로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추계와 새로운 추계모형을 반영한 장기제정전망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